

종합

“민간공항은 우리가, 군비행장은 타지역으로”

광주시·전남도, 광주공항 이전 토론회 입장차 재확인

정부 “지역민 뜻대로”... 참석 주민들 고성 오가기도

광주공항 국내선과 전투비행장의 무안공항 이전 논란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시민단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가 열렸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간공항은 ‘우리 지역으로’, 군비행장은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토해양부는 원칙론을 피돌이했다.

(사)호남미래연대(이사장 정용화)와 광주전투비행장 이전대책위는 17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공항(민항·전투비행장) 이전 공개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오수원 조선대 사회과학대학장의 사

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폐널과 방청객들이 열린 논쟁을 벌였다.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에 대해 광주시 박남언 교통정책과장은 “국내선이 이전되면 호남권 주민들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며 “공항은 많은 배후인구가 필요하고 접근성도 편리해야 하지만 무안공항은 이 같은 여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 양준연 도로공학계획담당은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은 정부의 정책 사업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돼야 한다. 국가의 새로운 기간시설이 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광주·전남 시도민의 협조가 필

요하다”고 반론을 폈다.

국토연구원 조남권 국토인프라전략센터장은 “광주공항 기능 유지 여부는 KTX 호남선 개통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이며 한 지역에 두 개의 공항이 유지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면서 “광주공항이 도시 주변에 위치해 편리성은 높지만 소음 문제로 도심부적격 시설이었다. 삶의 질을 보장한다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지는 게 정상이자”고 주장했다.

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해 박 과장은 “많은 인구가 사는 도시에 군비행장이 있는 것은 부적절하고 외국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안공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 과장은 “군비행장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면 중국의 반발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투자 유치에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광주전투비행장 이전대책위 임형철 대표는 “광주에서는 공군의 비행이 상공에서 이뤄지는데 무안에서는 서해 바다에서 이뤄질 수 있는 군사적 유리함이 있다. 무안은 안개 일수가 5배 이상 최소화시킬 수 있다”며 무안공항으로 이전을 촉구했다.

국토해양부 황성규 항공정책실 과장은 “국제항공노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지역 발전에 중요하다. 국제·국내선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지역민의 의사를 존중한다. 지역 전체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도의 의견조율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토론회자들의 발언 내용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 주민들은 상대측 의견에 반발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나라 자성 분위기에 민주당 “고민 되네”

한나라당 22명 의원이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예산 날치기의 책임 규명이나 원상 복원의 움직임이 없는 반성의 진정성을 믿기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자성의 목소리를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여론의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주당 김부겸·정장선·원혜영·김성곤·우제창·박은수·송민순 의원 등 비교적 온건하다는 평을 받아온 의원들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폭력국회’ 등 잘못된 국회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해법 등을 모색했다.

이들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향후 중요한 의사결정인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원칙을 갖고 폭력에 동원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회주의 복원하기 위해서 적극 호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 참석 의원이 전했다. 이들은 20일 다시 회동한 뒤 그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청원·김노식 성탄절 가석방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황희철 차관)는 지난 18대 총선 때 공천헌금 사건으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와 김노식 전 의원 등을 가석방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들은 이귀남 법무장관의 승인이 나면 오는 25일 성탄절에 풀려날 전망이다.

서 전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때 6개월 특별 감형을 받았다.



물동량 200만TEU 시대 연 광양항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TEU 달성 기념식’을 갖고 ‘200만 TEU 시대’ 개막을 자축했다. 공단측은 연말까지 물동량이 최대 205만TEU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광양항이 개장 12년 만에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TEU 시대를 열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17일 광양 월드마린센터에서 박준영 전남지사, 이성용 광양시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TEU 달성 기념식’을 갖고 ‘200만 TEU 시대’ 개막을 자축했다. 공단측은 연말까지 물동량이 최대 205만TEU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담양 블루베리·영암 대봉감·함평 장어 등

전남 6개 특산품 명품 향토산업 키운다

농식품부 전국 30개 선정 국비 등 30억씩 지원

담양 블루베리, 영암 대봉감, 함평 장어 등 전남 6개 특산품이 정부의 명품 향토산업 사업에 선정돼 집중 육성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2012년도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30개 향토 자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모두 63개 시·군이 72개 사업을 응모했으며 서면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지난 15일 ‘향토산업육성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전남에서는 ▲담양 블루베리 6차 복합산업화 ▲장흥 청태전 산업자원화 클러스터 ▲강진 편향 명품화 육성사업 ▲영암 대봉감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함평 장어 명품화 사업 ▲영광 맥(麥)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이 선정,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향토산업 육성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특색 있는 농수산물에 포함된 다양한 유무형 향토 자원을 발굴해 이를 바탕으로 1·2·3차 산업을 연계시킨 지역의 핵심 전략 산업을 육성

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이들 사업에 제품과 브랜드 개발, 마케팅, 향토자원의 지적재산권화 등 소프트웨어와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에 3년간 사업별로 국비 15억원, 지방비 및 자부담 15억원을 합해 30억원씩을 포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지역에 부존된 향토자원을 발굴해 1~3차 산업이 연계된 복합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산업 전진기사를 통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재해 복구 지원금 18일만에 나온다

내년부터 폭설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집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본 국민에게 정부 지원금이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된다.

소방방재청은 17일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 200여억원을 소방방재청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내년부터 재산 피해액이 산출되면 바로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규정에 따라 피해 복구 이전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게 돼 있지만, 예비비에서 지원금을 끌어오게 돼 있어 정부가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 예산에서 지원하면 피해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소방방재청이 시·군·구로 지원금을 내려 보낼 수 있다.

지금까지 국민이 자연재해를 당한 지 평균 42~53일 만에 정부 지원금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7~18일만에 받을 것으로 소방방재청은 전망했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주택이 파손됐을 때 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설

실적으로 ‘양항 체제’ 정당성 입증한 광양항

광양항이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 TEU 시대를 열었다. 이는 개장 12년 만에 이른 쾌거로 ‘투 포트(양항) 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면서 광양항이 동북아 물류 허브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16일 현재 광양항의 물동량은 198만7000TEU로, 19일이면 올 목표인 연간 200만TEU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광양항은 명실상부한 국내 제2컨테이너 항만으로 자리 잡게 됐다.

광양항은 그동안 많은 난관에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지난 1998년 개항 때 연간 물동량은 3만3768 TEU에 불과했다. 그 후 2002년 108만 333TEU, 2004년 132만1865TEU, 2006년 175만5813TEU, 2009년 181만438 TEU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광양항의 처리 물동량이 12

년 만에 70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성장세는 ‘투 포트 정책’이 실패했다는 일부 주장이 허구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2011년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 개통, 2015년 25선석 규모의 컨테이너부두 완공과 함께 388만㎡의 항만 배후 물류단지도 들어서면 2014년 300만 TEU도 쉽게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물동량이 300만TEU를 넘어 서면 물동량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양항이 독자적인 물동량 확보에 한계가 있어 양항 정책을 접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 드러난 셈이다.

광양항의 경쟁력이 입증된 만큼 소모적인 투 포트 논쟁을 접어야 한다. 이젠 광양항이 하루빨리 실질적인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자리 잡아 국가와 지역 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리운전 횡포 언제까지 좌시할 건가

송년회 등 모임이 많은 연말을 맞아 대리운전 구하기가 무척 어렵다고들 한다. 특히 유흥가가 몰려 광주지역 대리운전의 70%를 소화하는 상무지구에선 1만 원의 요금으로는 거절 당하기 일쑤다. 넘쳐나는 취객들의 대리운전 요구에 기사들이 웃돈 요구를 단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상무지구에서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3000원 이상의 웃돈을 얹어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첨단, 하남 등 외곽에 가기 위해서는 ‘2배’를 줘야 기사를 구할 수 있을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바가지 요금 시비나 자객 미달 운전기사까지 운전대를 잡는 등 갖가지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리운전업체가 지자체의 관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것이다.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대리운전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경찰 역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업계 자체에서 정하다 보니 부르는 게

요금이라는 얘기가. 이용객들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 영업용 택시 잡기가 어렵다고 요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일부 대리운전업체들은 운전기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험이 없는 아르바이트 기사까지 고용하고 있다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해 그만큼 교통사고의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당국은 실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손을 놓고 있다. 대리운전에 관한 기본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자 등록만 하면 개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리운전업체가 지자체의 관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것이다.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대리운전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경찰 역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업계 자체에서 정하다 보니 부르는 게

광주 풍력발전기 중국에 수출

시그너스파워 - 신천실업 MOU 체결

광주에서 생산된 풍력발전기가 중국에 수출된다.

광주시는 1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중국 상하이에 있는 풍력발전기 판매업체인 신천실업발전유한공사, 광주지역 풍력발전기 생산업체인 ㈜시그너스파워와 공동으로 풍력발전기 양산공장 및 R&D(연구·개발) 센터 설립을 위한 3자간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신천실업발전유한공사는 내년 시그너스파워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한 뒤 풍력발전기를 수입해 중국 현지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시그너스파워가 개발한 풍력발전기는 항공공학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수직축 풍력발전기로, 미풍에도 쉽게 가동되는 것이

특징이다.

시그너스파워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1만 6500㎡ 규모의 부지에 공장 및 R&D센터 설립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풍력발전기가 중국에 본격적으로 수출되면 광주 R&D특구 지정과 지역 풍력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관태 광주시장은 “거대시장으로만 생각했던 중국이 이제는 투자 유치 대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됐다”며 “이번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중국의 자본과 우리의 기술을 결합하는 바람직한 투자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美, 6자회담 재개 北 5대 의무사항 제시

추가도발 중지·비핵화 이행 포함

미국 국무부는 16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의 추가 도발 중지, 비핵화 조치 이행 등 북한이 이행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의무사항을 큰 원칙으로 제시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들이 합의됐고, 북측에 전달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이 해야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그러면서 ▲도발행위 중지 ▲역내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 ▲2005년 공동성명에 입각한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국제적 의무 준수 등을 5대 이행사항으로 제시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은 이행해야 할 것들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내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정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 A X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 사 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시력 교정가능하면 현역 간다

국방부 '신체검사규칙 개정안' 예고

내년부터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안경 등으로 시력교정이 가능한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또 ‘고의 발치’를 통한 병역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면제 기준 점수가 강화되는 한편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도 병역 면제를 받지 못하고 보충역(4급)으로 근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징병신체검사등급검사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근시의 경우 ‘-12디옵터’, 난시는 굴절률 ‘5디옵터’, 원시는 ‘+4디옵터’ 이상인 징병 심검 대상자는 시력교정 여부와 관계없이 4급 판정이 내려져 보충역으로 분류됐지만, 내년부터는 시력교정이 가능하면 모두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된다.

또 전체 28개 치아 중 보통 9~10개가 없으면 받게 되는 50점 이하가 병역 면제 기준이었으나 내년부터는 28개 중 16개 정도의 치아가 없는 경우인 28점 이하를 받아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인공디스크를 새로 끼워넣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던 병역 면제 대상이었지만 이 기술을 받더라도 척추의 운동성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보충역으로 분류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